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절대 안돼"

광주·전남 국회의원 토론회·서명운동 등 전개
전남, 전국 수산물 생산 60% 점유 타격 불가피
윤영덕 "광주·전남만이라도 대응 방안 논의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23일 오후 4시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전 오염수는 일본의 해양 투기 후 이르면 7개월 내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수로 인한 우리지역 바다의 생태계와 수산업 피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토론회에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방사능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IAEA 검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지역 먹거리 대응' 발제에서 "최근 5년간 일본 농수산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인 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인 양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광주·전남 지역에서라도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윤재갑 위원장(해남·완도·진도)은 같은 날 완도군 고금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열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에 대한 소비는 단순 감소가 아닌 소비 절벽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수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등 경제·물적 피해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산업을 궤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며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방사능 테러 시도 앞에 국민께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 완도군의회 김양훈·박병수·박성규·지민·최정욱 의원(가나다순)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양병호 부위원장, 이충원 덕동리 어촌계장 등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도 같은 날 송정 5일시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수산물 수입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현장 민심을 청취했다.

이 의원과 광산갑 지역위원회는 이달 3일부터 광주시의원, 광산구의원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광산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뻔뻔함과 이를 막지 못하고 들러리 노릇을 자임하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 태도에 분개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어민들,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와 먹거리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당연한 불안을 '괴담 유포'로 몰아붙이는 여당이 한심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수기자

쇄신 드라이브 野혁신위…공천룰도 손댈까

김은경 '현역 기득권 체제 혁파'
파격 공천 개혁안 나오나 주목
비명계, '공천 학살' 의심 속
"지도부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김남희·윤형중 대변인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쇄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쇄신 칼날이 어디까지 다다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혁신위는 출범 후 사흘 만인 두번째 회의에서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이라는 강경 카드를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사는 단연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공천 제도에 변화가 있을지다.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혁신위 첫 회의에서 공천 시스템 개혁 의지를 밝힌 이후 '공천룰 손질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냐'라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 사실상 혁신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권을 받은 데다 취임 일성으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겠다"고 천명한 만큼, 결국 '현역 의원 메리트' 축소를 비롯한 공천 개혁안을 발표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현역 의원이 당초 2-3명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해식 의원 1명에 그친 점도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관계자는 25일 "공천 문제는 아직 논의한 적 없다"면서도 "특정 논의 주제를 배제하지도 않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2015년 '김상곤 혁신위'에 준하는 공천 혁신안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공천룰은 이미 지난 5월 확정됐다. 혁신위가 새로운 공천룰을 내놓는다면 기존 룰을 재개정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항목 조정 등의 '우회로'를 찾을 수도 있다.

다만, 불과 한두 달 만에 새로운 룰이 제기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벌써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개혁을 빙자해 '비명 학살' 도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특정 계파 배제를 위한 것이라면 분란이 불 보듯 뻔하다"며 "현역 의원에게 기득권이 얼마나 있나. 그러려면 당 지도부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의 한 관계자는 "공천 이야기는 너무 빠르지만, 혁신위가 그 부분을 포함해 모든 부분을 논의할 수는 있다. 현역의원의 기득권은 좀 줄여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클릭

조오섭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 발의

고물가 시대를 맞아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25일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6년간 재정상의 이유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28곳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물가 상승 여파로 잇따라 학식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지원 범위가 불명확해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초·중·고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에 따라 사실상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교의 학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최근 고물가 등 영향으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천원의 밥상 지원은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김승남 '국회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23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책임을 다하고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한 한국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2014년 시작돼 올해로 제8회를 맞이했다.

김승남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89개 지역에 매년 1조원 씩, 10년간 10조원의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김진수기자

CMYK